

李 “국가권력으로 장난... 강패냐” 尹·檢 정면 비판

재명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저격 “권력 남용 결과 역사가 증명” ‘번개탄 생산금지’ 등도 비판 오늘 체포동의안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강패’에 비유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이지 대표냐”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강패지 검사나,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강패지 대통령이냐”며 “폭력배가 폭력을 저지르면서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건 강패의 인식이라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과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가족, 친구, 후원자, 이웃, 지지자들, 아는 사람들까지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통이 크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맞는 일인가. 권력을 남용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국정 실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극단적 선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방대책이라고 내놓아 논란이 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 금지’를 거론하며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러운데 국가 최고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을 농단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신동진 쌀’ 등 우량 품종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생산성 떨어지는 나쁜 품종 쌀만 사겠다는 건데, 농업을 퇴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쓰아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길 충고한다”며 “국가 권력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정도는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

거의 원조 설계자”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이라며 “지방행정 모든 과정을 검찰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가, 억지도 정도껏 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며 무도함에 제대로 맞서겠다”며 “검사독재 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아닌 검찰 게이트”라고 했고, 임선숙 최고위원은 “성공한 정책을 꼬투리 잡아 사법 살인 자행에 나선 게 이 대표 구속 영장 실제”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판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변하지 않는 그 인식이 참 한심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에 놓인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금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며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기에 이 대표를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로 결정할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답정너 의총’을 열어 자율투표라고 우겨도 듣는 국민들은 사실상 ‘강제당론’임을 모두 알고 있다”고 ‘자율투표’를 가장한 ‘강제당론’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권노갑 “다음엔 당당하게 임해야... 선당후사 발휘”

이재명 구속영장에 쓴소리도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엔은 몇몇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저도 그동안에 온갖 고난과 시련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이 대

표가 처한 이 고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대표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역사에 길이길이 이어나갈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 상임고문님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길, 현재 우리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갈지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부, 지자체에 ‘민생예산’ 261조 신속집행 독려

정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에 261조원 규모의 상반기 재정과 민생안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243개 지자체 예산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열고,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지자체별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5%(약 171조원)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사전 준비가 완료된 계속·이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준공금·기성금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상반기 집행 가능 규모

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와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해 선금 지급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금 지급상환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집행을 앞당기도록 독려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민생안정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특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안정예산 규모는 약 90조원에 이른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아이들 건강은 국가 책무... 소아의료 인력 확충”

서울대어린이병원 방문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2일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필요한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



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인력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 상급 종합 병원평가 시 소아진료체계 지표 반영 등 개선 대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날 현장에서 의료진, 전문가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복지부장관과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또 “소아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3월 임시국회 일정 입장차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회동 “양곡법, 與 외면시 법따라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정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직후, 박 원내대표는 “24일과 27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임시회 관련해서는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지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 (3월 임시)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며 “삼일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빚투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의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병훈 “문화재위원 수, 호남·경상권 25% 불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 남구을·사진)은 22일 “문화재위원회 위원 99명 중 수도권 지역의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 차지했다”며 “문화재 분포율이 48.6%에 달하는 호남권과 경상권의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

화재정의 문제위 업무 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 편중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보와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율을 보면, 수도권은 35.1%에 불과하다. 반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



재의 절반에 가깝다. 하지만 문화재위원 수는 25.2%에 그쳤다. 이 의원은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의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